

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95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03.30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대지급금의 미 상환시 수급권의 중지는 과도한 규제 조항으로, 상위법인 「의료급여법」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가. 「의료급여법」에 없는 과도한 규제조항 정비 ⇒ 제7조제3항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☐ 개정조례안 : 불임1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3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☐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7. 1. 11. ~ 2017. 1. 31. (20일간)

☐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4
- 방침결정문 : 불임5

< 붙임 1 >

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의료급여법」 제3조”를 “「의료급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료보호수급권자”를 “의료급여수급권자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수입)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·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②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지출)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·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·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, 대지급금 상환의 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,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대지급금의 상환등) 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초의 납입 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.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.

1.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
2.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
3.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

-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.
-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2(결손처분) 시장은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.

1.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
2.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3.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
4.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“심의위원회”에서 의결한 경우

제8조 중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손 경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료보장계장 박 용 희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선 남 (행정 2872)

<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의료급여법」에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세입과 세출)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의료급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<u>의료보호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</u> 세출로 한다.	제2조(세입과 세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료급여수급권자에</u> ----- ----- --
제5조(수입) ① <u>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.</u>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<u>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, 금액,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</u> ③ <u>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</u>	제5조(수입) ① <u>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.</u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지출)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지출)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·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,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,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.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.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.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<p>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대지급금의 상환등) ①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.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.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.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<p>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,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.</p> <p>④제3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"지방세채납처분"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③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의 2(결손처분) 시장은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의 2(결손처분)시장은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. .</p>
<p>1.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</p> <p>2.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</p> <p>3.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</p>	<p>1.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</p> <p>3.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4.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“심의위원회”에서 의결한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제8조(준용)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<u>의한다.</u>	제8조(준용)----- ----- <u>따른다.</u>